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 
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18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박성민 · 김상훈  
김 건 · 광규택 · 김소희  
김선교 · 서지영 · 서범수  
박덕흠 · 윤상현 · 조경태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.

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 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 신설

등).

##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7조”를 “제7조(제2항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  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 
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 
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 
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3조(적용범위) ① (생    략)	제3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 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는 <u>제7조</u> 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조(제2항은 제외한다)</u> -----.
③ (생   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연체이자의 제한 등) ① (생    략) <u>&lt;신    설&gt;</u>	제7조(연체이자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를 받을 수 없다.</u>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   략)	<u>③</u> ·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